

박근혜 당선인에게 거는 국민적 기대

2012년 12월 19일에 실시된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가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를 누르고 새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1987년 헌법 체제에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에 이어 여섯 번째 대통령이다. 무엇보다도 새 대통령은 여러 가지 기록을 보유한 대통령이다. 그만큼 새 대통령에 대한 기대도 크다.

첫째,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다. 이는 그 이전의 유교적인 조선을 비롯해서 고려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도 보이지 않고 신라시대의 진성여왕이나 선덕여왕 이후 최초라는 점에서 역사적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 이전의 역사가 군주국의 역사라서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공화국가에서 여성 대통령도 매우 드문 일이다. 입헌군주국인 영국이나, 공화국이지만 의원내각제 국가인 독일에서 대차나 메르켈 수상이 나오긴 했어도 프랑스나 미국에서처럼 대통령제 내지 이원정부제(반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아직도 여성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성 대통령일 뿐 아니라 미혼의 여성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세계적으로도 거의 그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 동남아시아나 라틴 아메리카에서 여성대통령을 다수 배출하긴 했어도 독신 여성 대통령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바로 그런 점에서 여성 대통령에 거는 기대가 각별할 수밖에 없다. 여성 대통령은 여성 특유의 섬세함을 통해서 그간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거치면서 어수선한 나라의 분위기를 안정적인 궤도로 진입시켜야 할 역사적 책무를 안고 있다.

성 낙 인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
-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 경찰위원회 위원장



둘째, 박근혜 대통령은 좋은 싫든 간에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공과 과가 혼재한 상태이다.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더불어 민주화를 가로막고 인권을 짓밟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럼에도 국민들이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택한 이유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부정적인 평가를 압도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20세기 지도자였던 박정희의 프레임에 갇혀서는 안 될 것이다. 정보화, 세계화, 지방화가 화두로 제기된 21세기의 지도자는 20세기적인 농경산업사회의 지도자와는 그 궤를 달리해야 할 것이다.

위 두 가지 주어진 명제에 기초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새로운 역사적 과업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대선과정에서 제기된 최고의 화두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의 민주화였다. 대한민국의 경제헌법과 관련하여서는 이미 제헌헌법에서부터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국가의 규제와 개입을 정당화해 왔다. 그런데 1987년 헌법에서 물론 약간의 수정이 있기는 했지만 경제질서의 원칙조항에서 당시의 시대적 화두였던 정치의 민주화와 더불어 사회정의를 경제의 민주화로 치환한 것이다. 그런데 이 조항이 도입된 1987년 헌법 이래 경제의 민주화는 당연한 명제였지만 이를 특별히 정책적 기조로 제시하거나 관심을 가지지 못하였다. 그만큼 경제의 민주화도 중요하였지만 우선 정치의 민주화를 구현하느라 영일이 없었다는 측면과 1997년에 일어난 IMF환란과 더불어 경제위기 속에 경제적·사회적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어

갔기 때문이다. 이는 마침내 이명박 정부에서 한편으로는 세계적인 재정위기에 직면하고 국내적으로는 10년의 진보정부를 마감하고 새로 등장한 우파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로 인해서 가진 자에 비해 가지지 못한 자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되었기 때문으로 평가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지난 정부에서 양극화 현상은 심화되었고 이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비등한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제 박근혜 정부의 최대과제는 양극화 해소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가 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상대적으로 진보에서 강조하는 평등주의적 이념은 우파인 박근혜 정부의 탄생으로 소외적 이웃의 상대적 박탈감이 더 심화되기 마련이다.

둘째, 그 어느 때보다는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통령 선거는 그야말로 All or Nothing 전부 아니면 전부 게임이다. 당선자가 모든 권력을 갖게 되고 패배자는 적수공권이 된다. 하지만 성공과 실패의 간격은 매우 좁다. 박근혜와 문재인이 차이도 불과 3.6%에 불과하다.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48%를 아우를 수 있는 정치적 지혜와 정책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국민통합을 기대할 수 없다. 경제적으로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지역적으로는 수혜 지역과 상실감에 젖은 지역 사이에 소통의 통로를 마련해서 이를 치유해야 한다. 박근혜 후보를 배출한 지역에서 80% 이상의 지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문재인 후보의 출신지도 아닌 광주에서 90%가 넘는 문재인 후보의 지지가 쏟아져 나온 이면에 대한 올바른 평가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어느 지역도 소외되어서는 올바른 정치를 구현하기 어렵다. 뿌리 깊은 지역갈등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삼 세대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 온 기성세대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지만 내일의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청년세대로부터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오늘의 대한민국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대한민국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미래의 세대를 위한 오늘의 설계가 더욱 요망된다.

셋째, 21세기 정보사회에서 정치지도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정보화 선진국이라고 자처하고 있다. 삼성전자, LG전자는 전 세계

를 휘감는다. 초고속 전산망이 가장 빠르게 작동하고 있다. 정보 선진국답게 정치권도 정보사회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야 한다. 정보사회에 드려온 명암을 잘 구별하여야 한다. 열린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정보공개는 더욱 가속화되어야 한다. 반면에 정보사회의 어두운 그림자인 사생활 및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서는 보다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 전세계적으로 백넘버화된 주민등록번호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명암이 밝은 쪽으로 그려져야 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주민등록제도는 바로 박정희 정부의 산물이기도 하다.

넷째, 세계화는 지방화로부터 시작된다는 명제가 일반화되어 간다. 그간 우물안 개구리처럼 지낸 대한민국의 세계를 향한 몸부림은 나름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G20정상회의를 비롯해서 행정, 입법, 사법의 정상회담이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마침 드라마, 팝을 통한 한류 열풍까지 가세하면서 세계를 서울로, 서울을 세계로 라는 명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세계 각국에서 한국학 붐을 일구고 있고, 한국학 연구가 온 지구촌을 감싸고 있다. 순응적인 세계사적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섯째, 지방화 시대를 이루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수도권 중심으로 불균형 성장을 이루고 있는 나라이다. 물론 수도 서울이 갖는 세계적인 상징성을 결코 외면할 필요는 없다. 그런 점에서 세종시로의 수도분할은 안타깝기는 하지만 이 또한 국민의 선택이라는 점에서 이제는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서울의 대통령과 세종시의 총리실이 체계적이고 유지적인 관계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작동시키는 시발점은 바로 새 정부가 해야 할 첫 번째 덕목이다. 수도의 분할이 지역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것인지 아니면 재앙이 될 것인지는 박근혜 정부의 손에 달려 있다.

여섯째, 겸손한 리더십이다. 민주화 이후에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권은 기득권에 안주하면서 선출된 권력의 호가호위 시대를 만끽해 왔다. 하지만 결과는 비참했다. 어느 정부할 것 없이 대통령이 물러날 즈음

에 이르면 온갖 부정부패에 휩쓸려 대통령과 그 가족이나 참모들이 참담한 곤경에 빠져 들었다. 이제 박근혜 시대에 이와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때가 되었다.

일곱째,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에서 권력자들을 중심으로 한 반칙은 여전히 있다. 이와 같은 반칙을 청산하는 길은 헌법정신에 투철하는 길밖에 없다. 제왕적 대통령시대를 마감하고 헌법이 예정한 대통령과 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내각 사이에 권력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를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한 내각은 빈 상자가 될 수밖에 없다.

끝으로 박근혜 대통령 본인도 평생의 화두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제 국가정체성의 확립을 위한 터를 마련해야 한다. 애국가 대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러도 그만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수도(서울), 국가(애국가), 국기(태극기), 국어(한글)가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게 헌법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한 헌법개정을 불가피하다. 1948년부터 1987년까지 39년 사이에 10개의 헌법을 체험한 국가에서 1987년 이래 사반세기 넘게 헌법의 안정을 구가하고 있는 이면에는 자칫 헌법개정이 불가능한 개헌 불임(不妊) 국가가 될지도 모른다.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고 정치적 타협으로 형클어져 있는 나라의 기본법이자 국가 백년대계의 초석인 헌법을 반듯하게 만들어야 한다.